

# 문희상, 초당적 국회 방일단 파견 제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 파견을 제안했고, 3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정실에서 열린 '의장-교섭단체 대표 회동' 중에 나와 기자들에게 이

같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3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이를 보내

이인영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 추진하기로 3당 합의" 오신환 "각당 결의안 준비해 회기 중 국회차원서 채택" 나경원 "초당적으로 우리 결의를 모은 점에 의미 있어"

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보복 조치 철학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18·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아울러 문 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방북단 추진에 대해서도 제안 하겠다"며 "3당 원내대표들은 동의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에 열릴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추진 대목들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오늘 저희 3당 원

내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긴급하게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오전에 공개 발언으로 제안드린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가 동의해주셨다"며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 각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종합해 회기 중에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도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고소·고발 얽힌 의원들이 자격 있나"

윤석열 청문회서 논란 박지원, 페스트트랙 과정 민주-한국 고소고발 언급 한국당 "청문회에 찬물" "모욕적 인사" 거센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빛어진 여야 간 공방이 청문위원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윤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 출석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지난 4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페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전이 언급되며 청문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만 전부 고소, 고발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박 의원도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받은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다.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당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달린 반응을 보였다. 송기현 의원은 "일반인들은 고발 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고발된 사람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지휘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언론도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중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열 두 명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 하나까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부터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

욕적 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래인 청문회와 법안 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해주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만 전부 고소, 고발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박 의원도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받은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다.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당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잇달린 반응을 보였다. 송기현 의원은 "일반인들은 고발 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고발된 사람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지휘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언론도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중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열 두 명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 하나까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부터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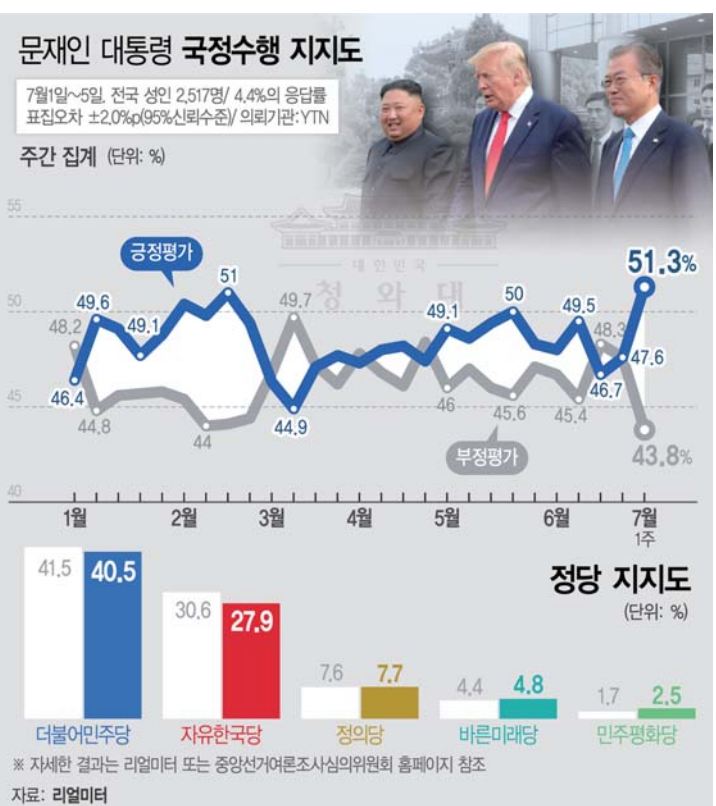
##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51.3%로 상승...판문점 회동 효과

日 수출규제 영향, 주 후반부터 지지율 하락 반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30 판문점 회동 효과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7월 1주차(1~5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포인트 상승한 51.3%(매우 잘함 29.4%, 잘하는 편 21.9%)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3.8%(매우 잘못함 28.6%, 잘못하는 편 15.2%)를 기록했다.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으로 벗어났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증가한 4.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주간 집계 기준으로 11월 3주차(52.0%)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30 판문점 회동 효과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대구·경북(29.1%→36.8%, 부정평가 57.8%) ▲부산·울산·경남(41.3%→46.9%,

부정평가 49.0%) ▲서울(46.6%→51.5%, 부정평가 44.8%) ▲대전·세종·충청(43.6%→47.7%, 부정평가 46.8%) ▲경기·인천(52.9%→55.1%, 부정평가 39.8%) ▲광주·전라(64.9%→66.0%, 부정평가 27.9%) ▲50대(44.6%→50.5%, 부정평가 46.4%) ▲60대 이상(35.7%→40.9%, 부정평가 52.3%) ▲30대(54.5%→58.8%, 부정평가 37.5%) ▲20대(46.8%→49.1%, 부정평가 42.5%) ▲진보층(75.1%→77.9%, 부정평가 19.4%) ▲보수층(18.8%→21.3%, 부정평가 76.2%) 등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이슈가 부상하면서 지난주 중반부터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다. 일간 국정 기준 지지율은 1일 49.6%에서 2일 51.3%, 3일 53.5%로 상승한 뒤 4일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0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효과로 지난주 초중반 주중집계(1~3일)에서 52.4%로 상승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 국내외 정치·경제적 현안으로 정국 정쟁이 이동한 주

후반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 유선(70%)·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5만 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7명이 응답을 완료해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7월1일~5일 전국 성인 2517명/4.4%의 응답률 표집오차 ±2.0%(95%신뢰수준) 의뢰기관:YTN 주간 집계 (단위: %)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